



국회직 9급 행정학

1. 출제영역분석

총론	3	재무행정론	4
정책론	2	정보화사회와 행정	4
조직론	5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4	지방자치론	2

2.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18	기출변형 문제	2	신유형 문제	-
-------	----	---------	---	--------	---

3.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짜맞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4	-	2	6	-	1	7

01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간행태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규칙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 ② 행정과 경영을 분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 ③ 가치와 사실을 일치시킨다.
- ④ 개인이 아닌 집단의 사회적·심리적 측면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 ⑤ 인간이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해설】 ① [X]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사회현상 연구에 있어 기존의 거시적인 제도나 구조가 아닌 개인의 표출된 행태의 객관성·실증적 분석에 초점을 두는 방법으로 면접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행태를 바탕으로 규칙성과 인과성을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② [X]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있어 행태의 규칙성은 공조직이나 사조직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두 조직에 공통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③ [X] 검증이 불가능한 가치를 연구대상에서 배제(가치중립성)하여, 가치와 사실을 분리시키고, 사실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초점을 둔다.

④ [X]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에서 개별행위자의 행태를 분석한다. 특히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조직의 구조나 경제적 유인에 기계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본 과학적 관리론의 가정을 부정하고 인간 개인의 사회적·심리적 측면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중요한 특색이다.

⑤ [O]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환경이나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동적 인간으로 연구된다. 따라서 인간이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는 이론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이론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인간행태의 동질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규칙성을 전제로 한다.
- ②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 ③ 가치와 사실을 분리시킨다.
- ④ 집단이 아닌 개인의 사회적·심리적 측면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131

▶ ⑤

02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들러(Fiedler)의 상황론이 제시하는 상황변수에는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 리더가 지닌 공식적 권한의 정도, 부하의 성숙도가 있다.
- ② 리더십이론은 자질론(특성론)에서 출발하였다.
- ③ 허쉬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리더십 상황이론에 따르면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이 있다.
- ④ 레딘(Reddin)의 3차원 모형에서 현신형은 과업을 중시한다.
- ⑤ 미시간대학교의 리더십 연구에서는 직원중심적(employee centered)리더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해설】**
- ① **[X]** 피들러의 상황론(상황적응적 모형)이 제시하는 상황변수에는 ㉠ 리더와 부하의 관계, ㉡ 임무(과업)구조, ㉢ 직위에 부여된 권력(공식적 권한의 정도)이 있다. 부하의 성숙도를 상황변수로 본 이론은 허쉬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리더십 상황이론(생애주기이론)이다.
 - ② **[O]** 리더십이론은 자질론(특성론, 속성론)에서 출발하여, 행태론 → 상황론 → 신속성·통합론으로 발달하였다.
 - ③ **[O]** 허쉬와 블랜차드의 리더십 상황이론(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유형은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지설참위)이 있다.
 - ④ **[O]** 레딘(Reddin)의 3차원 모형은 리더행동의 기본유형을 분리형, 현신형, 관계형, 통합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리형은 과업·인간관계 모두를 경시하는 유형, 현신형은 과업만을 중시하는 유형, 관계형은 인간관계만을 중시하는 유형, 통합형은 과업·인간관계 모두를 중시하는 유형으로 설명된다.
 - ⑤ **[O]** 미시간대학교의 리더십 연구에서는 리더십 유형을 직원중심형과 생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직원중심형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 올바른 지문

- ① 피들러(Fiedler)의 상황론이 제시하는 상황변수에는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 리더가 지닌 공식적 권한의 정도(권력), 임무(과업)구조가 있다(부하의 성숙도×).

summary | 리더십의 상황론적 접근법

	Fiedler	House & Evans	Hersey & Blanchard
상황변수	관계 / 구조 / 권력	부하특성 / 근무환경	부하 성숙도
리더유형	과업지향 관계지향	지시 지지 참여 성취	지시 설득 참여 위임

03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감사원장
-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④ 대통령비서실 보좌관
- ⑤ 국회 수석전문위원

【해설】 ①, ②, ③, ④ **[O]**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비서실 보좌관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⑤ **[X]**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이다(국회 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

▶ 올바른 지문

- ⑤ 국회 수석전문위원 - 별정직

summary | 특수경력직 공무원

구분	특징	예시
정무직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장·차관(법제처장, 통계청장, 기상청장 포함) 및 국가정보원의 원·차장, 국회사무총장, 감사원 사무총장 등
별정직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482, 483



04 예산집행의 신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에 대한 변경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얻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계속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의 의결을 받으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③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
- ④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⑤ 수입대체경비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이다.

- 【해설】**
- ① [O]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의 상호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 ② [X] 계속비의 지출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계속비】 ② 제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O] 예산의 이월에는 연내 지출 마감의 불가함이 예측된 명시이월과 예측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있다.
- ④ [O]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⑤ [O] 수입대체경비는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직접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 올바른 지문

- ② 계속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의 의결을 받으면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summary |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이용	입법과목(장·관·항) 간에 상호 융통(국회의결 필요)
전용	행정과목(세항·목) 간에 상호 융통(국회의결 불필요)
이체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재정·개정·폐지로 직무·권한 변동 시 예산도 이에 따라서 책임소관 변경(국회의결 불필요)
이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일정액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 ㉠ 명시이월 : 예측된 이월, ㉡ 사고이월 : 예측되지 않은 이월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과 초과지출 시를 대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 상한 :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국회의결 필요)
계속비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예산(5년, 연장 가능)
국고채무 부담행위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범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함. 지출권한은 아님.
수입대체경비	중앙관서 장이 일정 항목에 대해 수입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직접지출이 가능한 경비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확정 후 집행과정에서의 변경
총액계상예산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사업은 총액으로 예산 계상
신축적 예산 배정제도	㉠ 긴급배정(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 당겨배정(해당분기 도래 전 배정), ㉢ 조기배정(상반기에 집중 배정), ㉣ 수시배정(배정계획에 관계없이 수시로 배정), ㉤ 감액배정(삭감된 액수로 배정), ㉥ 배정유보(예산액의 일부에 대한 배정을 보류)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671~675



05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현상을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합쳐진 결과라고 해석한다.
- ② 사익 극대화의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경제인을 가정한다.
- ③ 행위자의 선호가 개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 ④ 공공선택론은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 ⑤ 오스트롬(Ostrom)은 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대안으로 관할권의 중첩 등을 주장하였다.

【해설】 ① [O] 합리적 선택이론(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은 개인을 합리적 행위자로 전제하고, 제도는 개인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균형으로 인식한다. 즉, 사회현상을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행위가 합쳐진 결과라고 해석한다.

② [O] 합리적 선택이론은 개인을 이론의 핵심으로 하고 이들에 대해 방법론적 개체주의, 합리주의, 경제인을 가정한다.

③ [X]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개인의 선호는 선형적으로 제도와 무관하게 주어져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다(외생적 선호).

④ [O] 공공선택론은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을 당연시하던 견해를 반대하고,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⑤ [O] 합리적 선택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오스트롬을 꼽을 수 있으며, 오스트롬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정부조직구조를 다층식으로 배열(관할권의 중첩)할 것을 주장한다.

▶ 올바른 지문

- ③ 행위자의 선호는 선형적으로 주어져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다(내생적 선호×).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151, 152

▶ ③

06 <보기>의 사례 중 갈등 요인이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ㄱ. 예산부서와 기획부서 모두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입사한 직원을 배치받기 위해 다투고 있다.

ㄴ. 홍보부서가 다른 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무부서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자, 법무부서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다.

ㄷ. 홍보부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을 지연하고 있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항의하였다.

ㄹ. 예산부서에서 배정할 예정인 5억원의 예산을 홍보부서와 기획부서가 서로 배정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ㄴ), (ㄱ,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ㄷ), (ㄴ, ㄹ)
- ⑤ (ㄱ, ㄹ), (ㄴ, ㄷ)

【해설】 [ㄱ, ㄹ의 갈등 요인] : **자원의 희소성**(자원 획득과 사용에 관한 경쟁), 제한된 자원을 많은 하위 부서들이 공유해야 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 조직 내에서 자원이란 예산, 공간, 인적자원, 장비 등을 포함한다. ㄱ의 경우에는 입사한 직원을 배정받기 위해 두 부서가 다투고 있으며, ㄹ의 경우 5억원의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ㄴ, ㄷ의 갈등 요인] : **업무의 상호의존성**(직무 설계상의 갈등요인), 일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 갈등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ㄴ의 경우 홍보부서는 계약 체결 시 법무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 업무의존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ㄷ의 경우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부서와의 업무의존성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428

▶ ⑤

07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대감은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확률과 관련된 믿음이다.
- ② 유의성은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이다.
- ③ 높은 성과가 항상 높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 경우 수단성의 값은 0으로 표현된다.
-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동기부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 ⑤ 선호의 강도는 개인이 보상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받았을 때 더 선호를 느끼는 경우 정(+)의 유의성을 갖는다.

- 【해설】**
- ① **[O]**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Expectancy)이란 자신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다는 기대를 말한다.
 - ② **[O]** 유의성(Valence)은 보상에 대한 주관적 선호의 강도를 말한다.
 - ③ **[X]** 수단성은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다. 여기서 높은 성과가 항상 높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 경우 수단성의 값은 1로 표현된다($-1 \leq \text{수단성} \leq 1$).
 - ④ **[O]** 브룸의 기대이론은 내용이론이 제시하지 못한 동기부여의 과정에서 오는 기대감과 유의성을 공식화해 동기부여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나 동기부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 ⑤ **[O]** 유의성의 강도는 개인이 보상을 받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보상을 받았을 때 더 선호를 느끼는 경우 정(+)의 유의성을 갖는다.

▶ 올바른 지문

- ③ 높은 성과가 항상 높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 경우 수단성의 값은 1로 표현된다.

summary | 브룸의 V.I.E 기대이론

기대감(Expectancy)	자신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다는 기대($0 \leq \text{기대감} \leq 1$)
수단성(Instrumentality)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1 \leq \text{수단성} \leq 1$)
유의성(Valence)	보상에 대한 주관적 선호의 강도(+유의성, 0유의성, -유의성)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411



0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해설】 ① [O]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③ [O] 동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

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X]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노동조합의 설립】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O] 동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

제6조 【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올바른 지문

④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554

▶ ④

09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② 계획 예산제도(PPBS)는 활동별 예산제도라고 부른다.
-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의회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킨다.
- ④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과거의 예산결정을 반성없이 수용한다.
- ⑤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에서 참여과정을 통한 예산관리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킨다.

【해설】 ① **[O]**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과목의 최종단위인 목을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② **[X]** 활동별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이다.
 ③ **[X]**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로 예산 산출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의회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계획예산제도이다.
 ④ **[X]**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과 신규사업을 재평가하여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과거의 예산결정을 답습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이다.
 ⑤ **[X]** 목표관리 예산제도는 참여의 과정을 통한 예산관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 올바른 지문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활동별 예산제도라고 부른다.
- ③ 계획 예산제도(PPBS)는 의회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킨다.
-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과거의 예산결정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재평가한다.
- ⑤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에서 참여과정을 통한 예산관리는 시간과 노력을 증대시킨다.

summary | 예산제도의 특징

예산제도	중점	기획책임	장점	단점
품목별 예산 (LIBS)	통제지향	분산적	• 회계책임 명확 • 재정통제 용이	• 융통성 저해 • 지출 목표의식 결여
성과주의 예산 (PBS)	관리지향	분산적	•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 • 집행의 신속성	• 회계책임 불분명 • 총괄계정에 부적합
계획예산 (PPBS)	기획지향	집권적	• 자원배분의 합리화 • 부서 간 장벽 타파 • 목표와 수단의 연계	• 사업구조작성 어려움. • 의사결정의 집권화 • 공무원과 의회의 이해부족
목표관리예산 (MBO)	관리기능	분산적	민주화, 창의적 참여	• 단기목표에 치중 • 평가기준개발의 어려움.
영기준예산 (ZBB)	감축지향	분산적	• 예산절감 • 관리자의 참여 확대	• 사업축소 및 폐지 곤란 • 분석기법의 적용 한계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696~707



10 페리(Perry)의 공공서비스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서비스동기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조직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특성을 지닌다.
- ② 합리적(rational) 동기는 공공부문 종사자가 정책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과 관련 있다.
- ③ 규범적(normative) 동기의 예로 공익에 대한 봉사 및 사회적 형평의 추구가 있다.
- ④ 정서적(affective) 동기의 예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책에 대한 헌신이 있다.
- ⑤ 공공서비스동기는 금전적 보상보다 지역 공동체나 국가에 대한 봉사에 무게를 둔다.

【해설】 ①, ⑤ [O] 페리(Perry)의 공공서비스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는 동기유발요인으로 금전적·물질적 보상보다 지역공동체나 국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이타심에 주목한 이론이다. 즉, 민간부문 종사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특수하게 나타나는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다.

② [O] 합리적 동기는 공무원의 동기부여 역시 개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의 효용극대화는 사익추구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참여, 중요한 사회정책 참가로 인한 효용을 개인의 효용과 동일시하는 극대화 전략이다.

③ [O] 규범적 동기는 공익에 대한 봉사 욕구와 정부전체에 대한 충성심이 핵심이다.

④ [X] 정서적(감성적) 동기는 이성보다는 국민(특정 집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희생하겠다는 희생정신과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감정적 표현이다.

개념차원	특징	하위차원
합리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형성 과정의 참여 • 공공정책에 대한 동일시 • 특정 이해관계에 대한 지지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 (attraction to public policy making)
규범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 봉사의 욕구 • 의무와 정부 전체에 대한 충성 • 사회적 형평의 추구 	공익몰입 (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정서적 (감성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한 정책몰입 • 선의의 애국심 	동정(compassion) 자기희생(self-sacrifice)

▶ 올바른 지문

- ④ 정서적(affective) 동기의 예로 국민의 대한 희생과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에 대한 헌신이 있다(특정 집단 이익 옹호×).

11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비비는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복구경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며, 목적예비비는 공무원의 보수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④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그 예산을 이체할 수 있다.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제출한다.

【해설】 ① [×] (목적)예비비는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② [O] 국가재정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49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 예산의 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법 제46조 【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④ [×] 예산의 이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한다.

동법 제47조 【예산의 이용·이체】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⑤ [×] 보조금 집행실적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 예결위에 각각 제출한다.

동법 제54조 【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예비비는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복구경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며, 목적예비비는 공무원의 보수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④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예산을 이체할 수 있다.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한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671~673



12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도적 책임성은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 ② 자율적 책임성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반한 능동적인 책임성을 의미한다.
- ③ 자율적 책임성은 국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
- ④ 제도적 책임성은 법규와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강조한다.
- ⑤ 제도적 책임성은 자율적 책임성보다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해설】

- ① [O] 제도적 책임성은 외부에 의한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 ② [O] 자율적 책임성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나 책임감에 기초해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하여 확보되는 능동적인 책임성을 의미한다.
- ③ [O] 자율적 책임성은 국민들의 요구를 인식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관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성이다.
- ④ [O] 제도적 책임성은 공식적인 법규와 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강조한다.
- ⑤ [X] 공무원들의 내면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자율적 행정책임은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제도적 책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행정책임이다.

▶ 올바른 지문

- ⑤ 자율적 책임성은 제도적 책임성보다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13 집단적 문제해결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명목집단기법에서는 전통적인 회의방법과는 달리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항상 허용된다.
- ② 델파이기법을 쓰면 지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독주와 다수의견의 횡포 등을 피할 수 있다.
- ③ 브레인스토밍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기 의견을 첨가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꾸미는 것이 제한된다.
- ④ 집단적 문제해결은 개인적 문제해결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적게 든다.
- ⑤ 변증법적 토론기법은 토론집단을 의견이 유사한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여 합의를 도출해내는 기법이다.

- 【해설】**
- ① **[X]** 명목집단기법에서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모든 아이디어가 제시된 이후 제한된(항상 X) 토의를 거쳐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이다.
 - ② **[O]** 델파이 기법은 대면토론 시 나타날 수 있는 성격마찰, 지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독주, 다수의견의 횡포, 집단사고(group think)를 방지할 수 있다.
 - ③ **[X]** 브레인스토밍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결합·수정·모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이 가능하다.
 - ④ **[X]** 집단의 문제해결은 개인적 문제해결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
 - ⑤ **[X]** 변증법적 토론기법은 작위적으로 의견이 다른 두 개의 팀으로 토론집단을 나뉘, 이들이 제기하는 반론과 이에 대한 제안자의 옹호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명목집단기법에서는 전통적인 회의방법과는 달리 (집단 간)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③ 브레인스토밍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기 의견을 첨가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꾸미는 것이 허용된다(piggy backing).
- ④ 집단적 문제해결은 개인적 문제해결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든다.
- ⑤ 변증법적 토론기법은 토론집단을 의견이 다른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여 합의를 도출해내는 기법이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241~244



14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기재순위 등) 제1항의 규정을 발췌한 것이다. 다음 중 현재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는?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한다.

- ① 대통령선거
- ② 국회의원선거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
- ④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선거
- ⑤ 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원선거

【해설】 해당 문제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 및 정당표방의 허용이 가능한지, 즉 정당공천제를 허용하는 선거와 그렇지 않은 선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 ①, ②, ③, ⑤ **【○】**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의회의원선거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 있다.
- ④ **【×】** 하지만 (시·도)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공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834, 839

▶ ④

15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 ① 「유통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유통세 총액의 일부 금액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총액의 일부 금액
- ③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금액
- ④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소비세 총액의 일부 금액
- ⑤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소비세 총액의 일부 금액

【해설】 ③ [O]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한다.

지방교부세법 제4조 【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

summary | 교부세의 종류

보통 교부세	① 용도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준 유지를 위해 용도의 지정 없이 교부되는 일반재원 ② 재원 :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 ③ 산정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규모를 기초로 산정
특별 교부세	① 용도 : 국가 역점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보전 등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교부되는 특정재원 ② 재원 :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3% ③ 산정 :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신청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부 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부, 신청 없이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정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소방안전 교부세	① 용도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특정재원 ② 재원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③ 산정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부동산 교부세	① 용도 : 지방세였던 종토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일반재원) ② 재원 :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총액 ③ 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10년 개정).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884

▶ ③

16 로위(Lowi)의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배정책의 예로 선거구 조정, 정부기관 신설 등이 있다.
- ② 재분배정책의 예로 누진세, 사회보장책 등이 있다.
- ③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④ 기업에게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 ⑤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의 달라질 수 있다.

【해설】 ① [X] 선거구 조정, 정부기관 신설 등은 구성정책이다.
 ⑤ [O] 로위(Lowi)는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 올바른 지문

- ① 구성정책의 예로 선거구 조정, 정부기관 신설 등이 있다.

summary | 정책의 유형

분배정책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의 배분 / 포크배럴, 로그롤링 현상이 발생 수출 특혜 금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주택자금 대출, 국유지 불하, 농민을 위한 영농정보 제공 등
재분배정책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 / 계급대립적 성격으로 치열한 갈등 누진소득세 제도, 영세민 취로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등
규제정책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 ① 경쟁적 규제 : 다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정 권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방송국 설립인가, 항공노선 허가 ② 보호적 규제 : 일반 대중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정책 최저임금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구성정책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 /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영향이 없지만, 대내적으로 게임의 법칙 발생,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나타냄. 정부기관 신설, 선거구 조정 등
추출정책	정책적 목표에 의해 국민들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 조세, 병역, 물자수송, 노력동원 등과 관련된 정책
상징정책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 및 국민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에 산출시키는 이미지나 상징과 관련된 정책 88 서울올림픽경기, 2002 한·일월드컵경기, 남대문복원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192~196



17 민츠버그(Mintzberg)가 제시한 조직(구조)을 구성하는 기본 부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략부분(strategic apex)은 최고관리층이 있는 곳이다.
- ② 핵심운영부문(operating core)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기본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다.
- ③ 중간부문(middle line)은 핵심운영부문과 전략부문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 ④ 핵심운영부문(operating core)은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한다.
- ⑤ 기술구조부문(techno structure)은 업무의 표준화를 추구한다.

- 【해설】**
- ① [O] 전략부분(최고관리층)은 조직에 관한 전반적 책임을 지는 부분으로 최고관리층을 말한다.
 - ② [O] 핵심운영부문(작업계층)은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작업 부문을 말한다. 핵심운영부문은 작업 부문으로 조직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의 공급이 이뤄지는 곳이다.
 - ③ [O] 중간부문은 최고관리층과 핵심운영 부문을 연계시켜준다. 계선에 위치한 중간 관리층으로 구성된다.
 - ④ [X]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략부분이다.
 - ⑤ [O] 기술구조부문은 조직 내 업무 처리 과정과 산출물의 표준화를 담당한다.

▶ 올바른 지문

- ④ 전략부분(strategic apex)은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한다.

18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②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에 따른다.
-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해설】 ① [O] 「국가공무원법」 제11조

국가공무원법 제11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② [O] 동법 제12조 제3항

동법 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X]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동법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④ [O] 동법 제10조 제4항

동법 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O] 동법 제10조 제2항

동법 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③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591

▶ ③

19 조직구조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능구조는 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변화에 민감하다.
- ② 사업구조는 산출물별 생산라인의 중복에 의해 규모경제의 실현이 어려워 효율성 손실이 있다.
- ③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지향한다.
- ④ 수평구조는 조직구성원을 핵심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하는 방식이다.
- ⑤ 네트워크구조는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 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

【해설】 ① [X] 기능구조는 각 기능 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 변화에 둔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부서별로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다른 목표관을 갖게 되고, 집권화된 조직구조로 인해 의사결정이 느리기 때문이다.

② [O] 사업구조는 산출물에 기반한 사업부서화 방식으로 산출물별 생산라인의 중복으로 규모경제의 실현이 어려워 효율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③ [O]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구조와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에 대한 동시적 필요가 요청되면서 등장한 조직형태로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구조이다.

④ [O] 수평구조는 조직구성원을 핵심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하는 방식이다.

⑤ [O] 네트워크 구조는 계약관계, 즉 협력적 연계로 맺어진 외부기관을 직접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구조 방식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기능구조는 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변화에 둔감하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333~338



20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재정건전성의 원칙
- ② 국민부담최소화의 원칙
- ③ 통일성의 원칙
- ④ 국민참여의 원칙
- ⑤ 투명성의 원칙

【해설】 ①, ②, ④, ⑤ [O] 「국가재정법」 제16조에는 재정건전성 확보의 원칙, 국민부담 최소화
의 원칙, 재정성과의 원칙, 투명성과 참여성의 원칙, 성인지적 효과평가의 원칙이 규
정되어 있다.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
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X] 통일성의 원칙은 「국가재정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612, 615

▶ ③